"고교 방과후 자율학습 공·사립 큰 편차"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다움 버스정류장 조성사업' 부실

광주 학교 간 학력, 진학 실적 차이로 사립학교 선호를 부추기는 이른바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한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이 물품 및 시공의 검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순애(민주·서구2)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고교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은 전체의 67.6%, 자율학습은 36.9%였다.

일반계고로 한정하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73.1%, 자율학습은 43.2%였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공·사립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율학습에서는 컸다. 사립 36개 학교 중 자율학습 참여율이 30%에 미달한 곳은 2곳에 불과했으나 공립은 15개 학교 중 11곳이나 됐다.

50%를 넘는 곳은 공립에서 1곳뿐이었으나 사립은 17곳이나 됐다.

2016년 완전 자율제 시행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데도 공·사립 간 대비가 뚜렷했다.

정순애 의원은 "자율학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학부모 인식에서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히고,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현상도 생긴다"고 진단했다.

또 조석호(민주·북구4) 의원은 이날 광주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산하 공기관인 디자인센터가 광주로 지역을 제한해 발주할 수 있는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을 법률적용을 잘못해 광주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16개소 승강장의 물품 및 시공 검수를 납품일 단 하루 만에 끝낸 것은 공사 준공계나 물품 납품계를 제출시 14일 이내에 준공 또는 납품 검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활용치 못한 부실한 검수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장애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설치됐고, 승강장의 주요자재가 설계와 다른 규격으로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용집(민주·남구1) 시의원은 이날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지만 정책에 제안된 것은 1건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등록된 제안은 총 328건이고 이 중 100명 이상 공감대를 얻은 제안은 17건(5%), 1000명 이상 토론 참여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은 '여성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단 1건에 불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포기했던 'F3대회' 유치 하겠다니…"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관광객 붙들 등록관광지 발굴 시급

6일 진행된 전남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미흡한 시·군별 등록관광지 발굴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언제는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더니…"=조옥현(목포 2·민주)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방침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F3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7년 간 열기로 했다가 수익성이 없어 포기하더니 올해 경주장 활성화 방안으로 F3 대회 유치를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전남도는 또 이달부터 2개월 간 100여 개에 달하는 도로표지판(F1경기장 → 국제자동차경주장) 수정에 나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F1 흔적을 지우는 데 또 돈을 쏟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관광객 발길 붙들 등록 관광지 발굴해야"=김기태(순천 1·민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2개 시·군 중 관광지 중 입장 수입이 100억을 넘긴 곳은 여수(363억 1000만원)·순천(151억5000만원)·곡성(146억3000만원) 등 3곳에 불과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정책을 요구했다.

22개 시·군별로 등록 관광지의 수와 종류, 개인사업체 등 편차가 심해 관광지 입장 수입으로 10억원을 못 번 지역도 11곳이나 된다는 게 김 의원 분석이다.

김 의원은 "섬과 해안선이 발달한 전남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신규 관광지 발굴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가 80억 넘게 출연했는데 왜 지역 업체는 외면하느냐=서동욱(순천 3·민주) 의원은 지역 업체를 외면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계약 행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84건(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100만원 이상 물품 계약)의 계약(143억원)을 체결했는데,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6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5건은 외지업체와 체결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액수를 기준으로 70%가 외지 업체와의 계약인데다,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5년간 도민의 세금으로 83억8000만원의 출자·출연금을 지원했는데 정보·문화산업의 특수성만 내세워 지역 업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조달청의뢰로 이뤄지는 기술이나 특정가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점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6일 오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없던 일 돼나

전남도 "환경부, 용광로 압력밸브 개방 문제 없다 결론 내려"

전남도는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고로)에 설치한 브리더(압력밸브) 개방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처분한 조업정지 처분도 없던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 "고로의 점검이나 정비에 따른 휴풍(休風)과정에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고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제철소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미분탄 투입 중단 시기 조정과 고로내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점검 시 브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공정개선을 전제로 허용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광양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해왔으나 최근 브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각각 예고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검토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통시장별 소방·전기·가스관리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광주시 시설 안전관리 대책 발표

광주시는 6일 전기화재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날 무등시장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윤동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이락영 케이티(KT) 서광주지사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다른 4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노후 시설과 밀집 점포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종합대책 세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별로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안전 현황·등급, 주요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을 관리하는 빅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별로 소방·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전담 점검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취약 시설·점포는 안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분전함을 개별 점포 150곳에 2020년까지 구축, 화재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광주시는 화재위험 요인 결과 분석을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된 공용 전기시설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국비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공사 등과 협력,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시비 17억원을 투입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17곳의 1807곳의 점포에 화재 알림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관할 소방서로 신호를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들과 특별 점검을 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각종 사고 예방과 대응에 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인들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방 탈출 카페, 코인노래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500여곳을 안전 점검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 행안부 장관상

지자체 숙의 주민참여 사례발표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이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자체 협력, 갈등관리 및 숙의 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에서 이뤄졌다. 전국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1차로 29개 사례 가운데 자문단의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0개 우수 사례에서 이같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공론화 결과 도출 권고 일인 11월 12일까지 추진됐다.

지역의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생활민주주의,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았다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공론화 모델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책학회의 정책 대상 시상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